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259-12 3층 T.02-778-4001. F.02-778-4006 pssp@jinbo.net http://www.pssp.org

2013년 5월 4주차 보건의료동향분석

2013년 5월 11일 ~ 2013년 5월 24일

주요 키워드

- 1. 중국 자본, 제주에 영리병원1호 신청** : 제주도는 중국 의료기업인 (주)CSC가 ‘외국 의료기관(영리병원) 설립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힘. 48병상 규모로 성형·피부·내과·가정의학의 진료과목을 두고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피부미용이나 항노화관련 진료를 할 예정. 송도 영리병원이 공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자본이 영리병원 설립을 요청하자 복지부는 당혹스러운 입장.
- 2. 내년도 수가협상 돌입** : 건보공단은 대한한 의사협회, 대한치과 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와 연이어 1차 수가협상을 진행. 1차 협상은 공단 협상팀이 각 단체들의 상황과 의견을 전해듣는 자리로 진행됐으며, 오는 23일~24일로 예정된 2차 협상 자리에서는 각 단체에 공단측 입장을 전달하는 시간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됨.
- 3. 치석제거 및 75세 이상 부분틀니 급여 적용** : 보건복지부는 제11차 건정심을 개최하고 ‘노인 부분틀니 및 치석제거 급여적용방안’을 심의·의결함. 이로인해 7월부터 치석제거 비용이 급여화돼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만 75세 이상 어르신은 7월부터 약 60만4500원으로 부분틀니를 제작할 수 있게 됨.
- 4. 기타** : 사무장 병원 처벌 강화 등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복지부 한의약 세계화 방안 논의, 인턴제 폐지 6월 결론, 복지부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13곳 최종 확정, 심평원 급여기준 개선 본격화, 진흥원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위한 설명회 개최, 노바티스 ‘디오반’ 등 6개 품목 리베이트 행정처분, 노바티스 백혈병치료제 환자 지원 전면 중단, 사우디 코로나바이러스 사망자 15명, 중국 조류 인플루엔자 사망자 33명

1. 보건의료정책

○ 복지부, ‘글로벌 헬스케어 간담회’ 개최 (5. 14)

최근 해외 환자 유치, 의료기술 및 병원 수출이 활발한 가운데,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글로벌 헬스케어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국 의료의 글로벌화를 실천하는 관계자들과 만남을 가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5만5000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했으며, 진료수입은 240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복지부, 공공기관, 의료기관, 관련 협회, 정책금융기관, 한국관광공사 등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그간의 성과를 설명하고, 현장에서 겪은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의료기관들은 중국 등 경쟁국 부상 등으로 인한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비자 절차 간소화 및 전문 통역인력 확충 등 인프라 개선 노력 ▲탈법적 브로커 행위방지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진영 장관은 “유망 사업 중 하나인 보건의료산업은 앞으로 투자해야 하는 산업”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보건의료산업을 경제 부흥의 선두주자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 사무장 병원 처벌 강화 등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5. 14)

명의를 대여해 요양기관을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며, 수가협상 시기는 10월 말에서 5월 말로 앞당겨진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명의를 대여해 요양기관을 개설한 경우, 명의대여 개설자(이른바 사무장)도 부당이득 징수 대상에 포함돼 해당 요양기관과 연대 책임을 지게 된다. 그동안 정부예산 편성시기와의 간극으로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수가협상 체결 시기는 종전 10월 말에서 5월 말로 앞당겨진다.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신청기한은 최초 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로 연장됐으며, 보험료 납부 금액은 직전 3개월의 보수 평균액에서 직전 3개월 보수월액의 평균액으로 변경된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직장가입자가 실직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보험료가 증가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직 후 2년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적용하는 제도다. 또 앞으로 건강보험증을 거짓 또는 부정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화된 처벌을 적용받는다.

○ 복지부, 11차 건강심 개최 ... 치석제거 및 75세 이상 부분틀니 급여 적용 (5. 15)

오는 7월부터 흔히 스케일링이라 부르는 치석제거 비용이 급여화돼 환자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단, 20세 이상, 연 1회 적용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서울 종로구 복지부 청사에서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강심)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인 부분틀니 및 치석제거 급여적용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치석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동안은 치료 등 후속처치가 있는 경우에만 보험을 적용받아왔으나, 앞으로는 후속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비급여로 5~6만원하는 후속 처치없는 스케일링은 오는 7월부터 연 1회에 한해 진찰료 포함 1만3000원(수가 3만221원)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스케일링을 급여화할 경우 2109억원의 건보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건강심은 이외에도 75세 이상 어르신 부분틀니 급여 적용과 관련한 세부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만 75세 이상 어르신은 7월부터 약 60만4500원으로 부분틀니(클래스프 유지형)를 제작할 수 있게 됐다. 의원급에 적용된 수가는 잇몸당 약 121만7000원이며, 본인부담 비율은 50%이다. 틀니는 원칙적으로 7년 이후에 다시 급여할 수 있으며, 임시부분틀니와 기존 사후유지 관리 급여항목 이외에 클래스프 수리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로 급여를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 복지부, 한의약 세계화 방안 논의 (5. 16)

복지부는 16일 한의약육성발전위원회를 열고 한의약 세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한의약 세계화 추진체계 구축, 한의약 지식재산 보호체계 확립, 한의약 해외거점 구축 및 확산 등을 3대 핵심과제로 정하고 ▲의료·교육·문화·산업이 융합된 중장기 정책방향 수립 필요 ▲한의약 지식·유전자원 체계화 ▲동의보감 글로벌 마케팅 등을 포함하는 세부 계획을 심의했다. 복지부는 새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보건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한의약 세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토론회 (5. 16)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중증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보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료의 질을 높이는 의료제공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날 강 연구위원은 의료보장성 강화로 환자 부담이 완화되면 의료이용에서의 도덕적 해이, 상급·대형병원 쏠림 등 의료체계의 왜곡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초대형 상급종합병원들의 독점력이 증가하게 되면 모든 국민에게 형평한 건강보험 제도 운영과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지속적인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의료제공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보장성 강화에 대한 취지는 동의하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지금까지 다양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이뤄졌을 때 결과적으로 보면 동네의원은 위축되고, 대형병원에 유리한 정책이 많았던 것 같다

며 지역에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의료수준을 상향 평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그는 환자 약제비 부담 강화 등 현재 대형병원 쏠림 방지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제기하며 대안으로 합리적 선택권 보장을 위한 환자 알권리 신장을 내놓기도 했다. 박용덕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은 대형병원 쏠림에 대한 약제비 부담 강화 등 환자 패널리티 정책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이미 나타났으며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정보제공자로 심평원 외에도 대한병원협회나 대한의사협회 등 공인된 공급자단체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대표로 참여한 안기중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도 환자 쏠림현상은 해결하기 힘든 문제라며 대안으로 환자 알권리를 주문했다. 병원 인력 양성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권용진 서울북부병원 병원장은 병원 쏠림현상이 검진, 확진, 치료 등 어느 부분에서 발생하는지 파악하고 쏠리는 부분에 대한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인턴제 폐지 6월 결론 (5. 20)

인턴제 폐지 시기가 6월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2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의료계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지난해 2월 2015년 인턴제를 폐지하고 뉴레지던트(NR)제를 도입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려 했지만 의대생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후 의대생 대표가 TF에 참가해 논의를 재개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3월 다시 입법예고하려 했으나 다시 지연되고 있다. 복지부와 의대생 대표는 현재 인턴 폐지라는 목표에는 합의에 이르렀다. 하지만 시행 시기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의대생들은 2018년 이후 순차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의대생 7000여 명이 참여한 의대협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64.5%의 학생들이 2018년 이후 폐지에 동감했다. 2015년 폐지 주장(35.5%)보다 30%포인트가량 많다. 복지부도 의대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 결정을 하겠다는 태도다. 복지부와 의대협은 5월 중 두 차례 토론회에 참가해 의료계 의견 수렴에 나선다. 6월 중에는 의대생을 상대로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 할 계획이다. 결론은 양측이 입법예고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6월 15일 이전에 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인턴제 폐지가 최소 2016년, 최대 2018년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2015년 폐지가 2년에 걸쳐 추진됐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에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다. 때문에 2018년 또는 2020년까지 또다시 미뤄지길 바라는 학생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이다”라며 “결국 2016~2018년에서 복지부와 의대협이 타협을 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복지부,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 (5. 20)

정신질환자의 범위에서 우울증 등 ‘경증 정신질환자’는 제외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의학적 의미의 모든 정신질환자를 일컫던 ‘정신질환자’의 정의가 사고장애·기분장애·망상·환각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또 보험상품 제공에 있어 정신질환 이력을 이유로 가입 거부 등의 차별이 없도록 관련 규정이 명문화된다. 이에 따라 차별행위가 발생하면, 보험 가입자 혹은 희망자는 보험제공자에게 정당성 입증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7월 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 복지부, 60억 규모 혁신형제약기업 해외진출 R&D 지원 (5. 21)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혁신형제약기업이 국제적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국제공동연구 및 기술교류 활동에 총 60억 규모의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혁신형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사업’은 혁신형제약기업을 대상으로 미래 보건의료 수요 대응연구 및 산업 고도화를 위한 핵심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신약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복지부는 국내 혁신형제약기업과 글로벌 제약기업·대학·연구소 등을 연결해 공동연구, 기술·인력 교류 등 개방형 협력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연구내용에 따라 기업별로 총 3억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 의협·병협·치협·약사회, 내년도 수가협상 돌입 (5. 21)

내년도 요양기관의 급여 수익을 결정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첫 만남을 가진 의약단체들이 한결

같이 경영난을 호소했다. 건보공단은 20일 대한한의사협회를 시작으로 21일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와 연이어 1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1차 협상은 공단 협상팀이 각 단체들의 상황과 의견을 전해듣는 자리로 진행됐으며, 오는 23일~24일로 예정된 2차 협상 자리에서는 각 단체에 공단 측 입장을 전달하는 시간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약사회는 1차 협상을 통해 약국의 경영난을 호소하면서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병원협회도 최근 자체적으로 실시한 병원경영 수지 결과를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힘든 실상을 호소했다. 의협측은 1차 협상자리에서 일차의료활성화와 수가 현실화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치과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등도 경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수가 인상을 강조했다. 공단은 의약단체들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 공감하면서 재정 규모를 함께 키워나가자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처음으로 정부 예산이 책정되기 전에 수가협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공단과 의약단체가 서로 협력해 공단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정의 규모 전체를 키우자는 의견이다. 그러면서도 올해 시행될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에 재정이 대거 투입될 것을 고려해 수가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13곳 최종 확정 (5. 22)

130억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에 인하대학교병원 등 13개 의료기관이 최종 선정됐다. 20일까지 상급종합병원만 추가 공모를 실시했으나, 접수된 곳 없이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의료기관은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13개 기관, 상급종합병원 1곳, 종합병원 10곳, 병원 2곳이 최종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상급종합병원 2곳, 종합병원 7곳, 병원 6곳 등 15곳의 의료기관에서 '포괄간호시스템' 모형의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운영하기로 했으나, 낮은 신청율과 선정위원회의 논의에 따라 이 같이 마무리했다. 15곳에서 13곳으로 지원 기관수가 줄어들면서 선정기관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늘어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복지부는 실비 지급이라는 지원 방식이 달라진 않으나, 환자 관리 등 합당한 요구사항이 있다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119억 원 정도의 사업비 지원은 시설 개선비 등 운영비에 쓰이며, 5~6억원 정도는 모니터링 인력 채용 비용, 병원 운영 컨설팅 인력 비용, 제도화 방안 연구 등에 쓰인다. 또 홍보 비용, 시범병원협의체 회의, 전문가 자문단 운영, 국민행복의료기획단 운영비 등에 예산이 책정됐다. 복지부는 오는 29일 시범사업 운영기관과 협약식을 가질 예정이며, 시범병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이 협의체를 통해 포괄간호서비스 운영, 지불정산 체계 등의 매뉴얼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 심평원, 급여기준 개선 본격화 (5. 2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현행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에 본격 나선다. 심평원은 22일, 의료단체(병협, 의협, 치협, 한의협)로부터 중요도 및 시급도 등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요구되는 급여기준 개선 우선순위 항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과제 선정을 위하여 의료단체(의협, 병협)와 실무자간 간담회를 개최했다. 심평원은 정부 정책과 심사평가원 미래 선진화전략에 따라 의료현장과 괴리가 있는 급여기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험급여 적용증, 기간, 횟수, 개수를 제한하는 급여기준(이하 규제적 성격의 급여기준) 279개 항목에 대하여 3개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심평원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올해 검토과제 104개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과제는 의과 88항목, 치과 11항목, 한방 5항목이다. 과제 선정은 그간 국회, 감사원 등 외부에서 개선검토를 요구한 항목과 병협과 의협이 공동으로 요청한 항목을 우선 검토과제에 포함했다. 치과와 한의과의 경우는 항목수가 많지 않아 모두 포함했다. 아울러 개선 검토과정에서 필요한 임상적 근거자료 등의 수집방법과 내용 그리고 개선 검토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도 논의했다.

2. 보건의료산업/기술

○ 중국 자본, 제주에 영리병원1호 신청 (5. 20)

지난 5월 16일, 제주도는 중국 의료기업인 (주)CSC(China Stem Cell)가 '외국 의료기관(영리병원) 설립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보건복지부에 사전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호근동 제주혁신도시 동쪽 9839㎡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산열병원'을 설립하겠다는 것이 요지다. 48병상 규모로 성형·피부·내과·가정의학 등 4개 진료과목을 두고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줄기세포를 이용해 피부미용이나 항노화관련 진료를 할 예정이다. 송도 영리병원이 공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자본이 영리병원 설립을 요청하자 복지부는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정부는 내심 해외 우수의료기관과 국내 우수의료기관이 합작 법인을 만들어 건강보험 가격 통제의 틀을 벗어나 질적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병원의 그림을 그려왔다. 그러나 송도가 아닌 제주에서, 대형병원이 아닌 소형병원이 영리병원 포문을 연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 진흥원, 한인의사협회 초청 포럼 및 글로벌 진출 협력 포럼 개최 (5. 20)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오는 22일 '재브라질 한인의사협회 초청 의료기기 협력 포럼', 24일 '한-브라질 의료기기산업 글로벌 협력 포럼'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남미 최대의 의료기기 박람회인 'Hospitalar 2013' 행사 기간 중 한국의료기기업체, 현지 시장 전문가, 재브라질 한인의사협회, 현지 바이어들과 함께 치러진다. 포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2일 '재브라질 한인의사협회 초청 의료기기 협력 포럼'에서는 ▲한국 의료기기산업 현황 및 정부정책 동향 ▲브라질 의료환경과 의료기기 진출 조언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또 24일 개최되는 '한-브라질 의료기기산업 글로벌 협력 포럼'은 ▲브라질 의료기기 시장 현황 및 성공적인 시장 진출 전략 ▲브라질 의료기기 인허가 제도 소개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 식약처, 의료기기 제도 개선 설명회 개최 (5. 2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라지는 의료기기제도에 대한 업체의 이해를 돕고자 의료기기 분야 3개 고시 개정에 따른 주요변경사항에 대한 민원설명회를 2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의료기기 국제표준화기술문서 국내 도입 ▲'의료기기의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개정에 따른 전자의료기기 국제규격 국내 도입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의료기기 품목 및 등급 변경 등이다.

○ 일본, 의약품 인터넷 판매 규제 강화 (5. 21)

일본이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후생노동성은 일반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에 대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고 실제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출점하는 쇼핑센터 스타일의 통신 판매 사이트 운영자에게도 일정한 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약국 등 판매자가 부담 의무를 정한 약사법 개정안도 검토대상에 넣고 구체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후생노동성은 이와 관련, 최근 열린 의약품 인터넷판매 제도 마련 검토회의에서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하는 대표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안을 집중 토의했다고 밝혔다. 후생노동성은 노동성 명령으로 제1류, 제2류 의약품에 대한 인터넷 판매를 인정하는 경우를 조건으로 하여 판매자뿐만 아니라 쇼핑몰 사이트 운영자에게도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일정한 책임을 부과하도록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 3D프린터 의료 적용 ... 미래 수술 트렌드 바꾸나 (5. 21)

3D 프린터가 부비동암 수술에서 위력을 발휘했다. 성균관대의대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백정환 교수는 지난 4~5월 40세 여성과 46세 남성 부비동암 환자를 3D 프린터를 이용해 성공적으로 수술했다고 밝혔다. 부비동암 수술은 암이 퍼진 얼굴의 골격을 광범위하게 절제한 후, 환자 자신의 어깨뼈와 근육 등을 떼어 내 붙여 기존의 얼굴골격을 대신한다. 수술은 CT 등 영상의학검사 자료에만 의존해 진행되는데, 얼굴골격을 정확히 확인하기 힘들어 수술 과정에서 부정교합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나면 구조물이 변형되기도 한다. 백 교수팀은 모형물을 통해 ▲수술 중 예상되는 얼굴 골격 절제 범위 ▲절제 부위 뼈의

두께 ▲절제 방향의 중요 구조물 등을 미리 혹은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수술에 이용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모형물은 정확한 뼈 결손부의 복원뿐 아니라 직접 혹은 복원에 사용되는 다른 소재인 티타늄의 모양을 정확히 만들어주며, 환자 및 보호자에게 수술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에도 유용하다. 현재 치과 분야에선 임플란트 시술 전 3D 프린터를 이용한 모형물 제작에 활발히 이용되고 있으나, 일반 수술에선 본격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 진흥원,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위한 설명회 개최 (5. 24)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오는 6월 3일 대구, 4일 부산, 10일 서울에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활성화 및 안전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설명회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9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2회씩 전국 주요 대도시에서 개최됐으며,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및 일반인들에게 해외 의료관광 시장 동향과 각 국가별 마케팅전략 등에 대한 최신정보를 제공해 왔다. 주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창조경제 성공을 위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정부정책 방향(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동우 팀장) ▲외국인환자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 방안(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외국인환자 유치 우수사례(서울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등) 등이다.

3. 제약업계

○ 일본, 제네릭 제약사 순익 급증 (5. 16)

일본에서 제네릭 제약사의 성장세가 뚜렷하다. 일본의 제네릭 의약품을 선도하고 있는 사와이제약, 니치이코, 토와약품 등 3개사는 2013년 3월기 결산에서 순이익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문가들은 제네릭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이들 제약사의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 제약, 약가인하 이후 첫 원외처방액 증가 (5. 16)

지난해 약가인하 이후 조제액 감소세가 성장세로 돌아섰다. 지난 4월 원외처방 조제액은 전년 동월 대비 2.4% 증가했다. 4월 조제액 증가는 만성질환 계통 품목들의 양호한 성장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 만성질환 치료제의 성장세로 인해 당분간 원외처방 시장은 점진적인 성장이 기대되며, 전문의약품 중심 업체들의 실적 개선도 전망된다. 국내 제약사들도 원외처방액 시장에서 긍정적인 성적을 거뒀다. 국내 업체의 4월 조제액은 5474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6% 증가했다. 국내 업체의 4월 점유율은 전년 동월 대비 0.8%p 증가한 69.5%를 기록했다. 국내 상위 10대 업체의 4월 조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9% 증가한 2146억원으로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

○ 노바티스, '디오반' 등 6개 품목 리베이트 행정처분 (5. 2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된 지난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행정처분이 계속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한국노바티스의 '코디오반정' 등 6개 품목에 대해 판매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오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식약처는 한국노바티스가 지난 2006년 8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의약품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 노바티스, 백혈병치료제 환자 지원 전면 중단 (5. 23)

한국노바티스가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에 대한 환자지원금 5%를 전면 중단한다. 23일 한국노바티스에 따르면, '글리벡'의 환자부담금인 5%를 전액 지원했던 '환자지원프로그램'을 오는 7월부터 중단한다. 오는 6월3일 '글리벡'의 특허만료로 제네릭이 쏟아져 나오면 노바티스의 단독 환자 지원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환자들의 기대처럼 환자지원 프로그램 종료에 따른 대체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환자지원은 '글리벡'이 국내에 들어올 당시 정부

와의 약속으로 10여년간 운영된 유일한 프로그램이다. 환자들이 '글리벡'을 처방받은 후, 희귀의약품센터에 본인부담금 환급을 신청하면 노바티스가 희귀의약품센터에 해당 금원을 지급하고, 희귀의약품센터는 다시 환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때문에 그동안 돈 안 들이고 먹었던 약값을 치러야 하는 환자들이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노바티스가 지원프로그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법원 제소까지 검토했던 제네릭사들은 별 문제 없이 제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

4. 의업단체 동향

○ 전의총, 리베이트 쌍벌제 위헌소송 제기 (5. 10)

전국의사총연합이 자영업자인 개원의사들 리베이트 수수를 뇌물로 규정하고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등의 과도한 이중처벌을 법제화한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전의총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회원들을 통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의총은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법률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원칙 중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소송이유를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인 의사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이 위헌소송을 제기한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위헌소송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이라고 밝혔다.

○ 의료계, 처방전 2매 발행 강제화에 '발끈' (5. 13)

정부가 의료기관의 처방전 2매 발행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제6차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처방전 2매 발행 및 조제내역서 의무화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은 내리지 못한 채 다음회의로 안건을 넘겼다. 이와 관련, 의료계에서는 “환자가 보관해야 하는 것은 처방전이 아니라 어떤 약을 복용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제내역서”라며 처방전 2매 발행을 강력히 반대했다. 의료계가 처방전 2매 발행에 반발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피해의식 때문이다. 송 대변인은 “처방전을 1매 더 발행한다고 해서 무슨 큰 일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자꾸 의사들을 옥죄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이러한 불필요한 규제가 너무 많다보니 대한민국에서 의사로 살려면 서너번 면허정지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슬픈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 의협, 2기 상임 이사진 명단 발표 (5. 14)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신임 총무이사 등 새 캐비닛 명단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제 37대 집행부 출범 2년차를 맞아 이뤄진 것으로, 강정희 신임 총무이사를 비롯해 신임 기획이사에 방상혁 전 홍보자문위원이 임명됐다. 1기 상임진은 소폭 변동되고 대부분 유임되었다.

○ 의협-건보공단 진흙탕 싸움, 수가협상 덕에 화해 (5. 14)

지난해 포괄수가제 시행 과정에서 진흙탕 싸움을 했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가 화해의 손을 잡았다. 상호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합의해 앞으로의 관계 회복이 주목된다. 14일 건보공단과 의협은 지난해 8월 포괄수가제 시행 당시 댓글 싸움으로 번지며 서로를 고소·고발한 건을 일괄 취소하기로 합의했다. 2014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을 앞두고 협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측에 따르면, 이날 수가협상 상견례 자리에서 공단측은 협상 진행전에 상호 고소고발을 취하할 것을 제안했고, 의협 대표로 참석한 노환규 회장은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공단과 의협의 고소·고발건과 별도로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과 의협 노환규 회장의 고소·고발건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사보노조는 지난해 의협의 일간지 광고 등을 문제삼고,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노환규 회장을 고소했다. 이후 의협도 건보노조 양대 위원장을 같은 혐의로 맞고소해 대립각을 세웠다.

○ 전의총, 특별진료 요구 공무원 사례 수집 나서 (5. 15)

전국의사총연합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병의원에 특별 진료를 요구한 사례 수집에 나섰다. 전의총은 지난 9일부터 건보공단과 심평원 직원들이 심평원 기준과 복지부 고시를 무시하고, 본인의 가족에 대해 특별 진료를 강요하는 사례를 제보받고 있다. 이번 조치는 보건분야에 있는 준공무원들이 자신들이 '슈퍼 갑' 위치에 있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본인 가족들에게 특별 대우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전의총은 의사커뮤니티와 페이스북을 통해 이러한 사례들을 모으고 있으며, 정확한 사례가 도출될 시 해당 단체장들에게 책임을 묻고 관련 직원들의 징계를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들은 삭감조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지침과 상관없이 보험규정에 어긋나게 치료약을 쓰거나 수술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전의총의 설명이다. 하지만 전의총 회원 대부분이 의원급을 운영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제보를 받은 건수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의총은 오는 16일까지 제보를 모아 언론공개 등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며 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부도덕성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 의협, 정신보건법 개정안 비현실성 지적 (5. 15)

정치권이 정신질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무더기 발의하고 있으나 일부 개정안이 전문가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15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정신보건법 개정안만 10개에 이른다"며 "정신보건법 개정은 단발성 처방이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통합 법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법안은 대체로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 시 보호자 동의 절차 강화나 강제입원 심사제 도입 등 정신질환자의 인권이 보호돼야 한다는 것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하지만 일부 개정안이 전문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비현실적인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정신질환자 인권 외에도 정신질환자의 건강권이나 주변에 있는 다른 국민에 대한 보호 등 고려사항이 많은 만큼 전문협의체를 구성해 정신보건법 개정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의협, 매출 5억 넘는 의원 성실신고확인제 적용에 '발끈' (5. 23)

의원급 의료기관의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매출 기준을 기존 7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인하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제 2차 세무대책위원회를 열고 입법예고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오는 28일 이전까지 협회 의견을 마련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국세청 등 과세관청의 역량만으로는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들의 성실한 세금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고안한 일종의 민간세무조사 제도이다. 연간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세무사 등에게 미리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고, 세무서에 세금과 함께 세무사로부터 검증 받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협 세무대책위원회는 이번 입법예고에 단독사업자와 공동사업자에게 동일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소관 정부부처인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청와대에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성실신고확인제 대상 확대 추진이 일차의료 활성화를 반감시킬 뿐만 아니라 일차의료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정책과도 상충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 간호조무사 업계, 간호인력 개편 대비책 마련 '촉박' (5. 23)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2018년 간호인력 개편 대비 첫 단계로 보수교육 강화를 선택했다. 현재 간호조무사는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보수교육 미이수 시 1차로 경고를 받고, 2년 이내 재위반 시 일주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처분이 약해 미이수자에 대한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상태이다. 간무협은 간호인력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보수교육을 받은 간호조무사가 1급 실무간호인력으로 전환되는 기준이 되도록 하나의 근거를 자체적으로 마련한다는 것이다. 간무협은 PC와

스마트폰을 통한 보수교육을 새로 도입했다. 간무협에 따르면 앞으로 간호조무사는 각 시·도회에서 4시간의 집체교육을 받고, 4시간의 온라인 강의를 이수하면 이수증을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게 된다. 보수교육은 협회 차원에서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회비 납부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회원과 비회원의 보수교육비 차이가 이를 말해준다. 강순심 간무협 회장은 “결코 간호조무사가 경력만 가지고 간호사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며 “교육과 경력, 그리고 시험에 합격해야만 간호사 또는 1급 실무간호인력이 되는 시스템을 원하는 것이지, 경력만으로 올라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호인력 개편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결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5. 질병/기타

○ 프랑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공포 (5. 1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래 사망자가 18명에 이른 가운데 프랑스에서도 감염 환자가 늘어나고 있어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프랑스 보건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 3명이 추가로 발생해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추가 환자는 프랑스에서 지난달 23일부터 치료받던 65세 남성이 입원한 발랑시엔 병원에서 발생했다. 한 사람은 같은 병실을 썼던 50대 남성이었으며 2명은 첫 환자를 치료한 35세의 여의사와 간호사다. 프랑스 보건국은 첫 환자가 격리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자가 발생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 조류 인플루엔자 사망자 33명 (5. 13)

H7N9형 조류 인플루엔자(AI) 유래 사망자가 33명으로 늘어났다. 중국 상하이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베이징 등 8개 성에서 사망자가 33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현재 130명이 H7N9형 AI 감염 판정을 받았으며 신규 감염자가 점차 감소세에 있으나 남부에서는 확산세가 멎지 않고 있다. 또 H7N9형 AI로 인한 가금류 사육업체 손실액이 약 7조2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축산업협회는 업계의 생산기반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며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 사우디, 코로나바이러스 사망자 15명 (5. 14)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숨진 감염 환자가 15명으로 치솟았다. 압둘라 알 라비 사우디 보건장관은 “작년 8월 이후 사우디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는 총 24명이며 이 중 15명이 사망했다”고 13일 밝혔다. 한편, 사우디를 방문 중인 후쿠다 게이지 WHO 사무차장은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밀접한 접촉’으로 사람 간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WH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집중 발생한 사우디 이스턴 주 호폰프 마을의 알무사 병원에서 역학 조사를 진행 중이다.

○ 신종 조류인플루엔자 사람간 전염 우려 (5. 20)

신종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H7H9’의 사람 간 전염 가능성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WHO는 H7H9이 다른 기존 AI 바이러스보다 사람 간 전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밝혔다. H7N9는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일부는 유전적 변이로 인해 전염성이 더 커졌다고 분석했다. 가금류 노출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감염 가능성을 차단해야 하며, 아직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 국내 첫 살인진드기 바이러스 감염 사망 (5. 21)

일명 살인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8월 숨진 63살 여성 환자(강원도)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 SFTS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사망으로 최종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환자는 지난해 7월 중순과 하순에 텃밭에서 작업하던 중 벌레에 물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발열 등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지만 그해 8월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 튀니지에서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환자 사망 (5. 2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튀니지까지 확산되었다. 튀니지 보건부는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66세 남자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그간 사우디, 카타르, 요르단, 아랍에미리트에서 감염자가 나왔으나 튀니지에서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부는 이번에 사망한 남자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여행한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사우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지다. 이곳에서는 지난해 9월 이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환자 31명이 발생했으며 16명이 죽었다. WHO는 튀니지에서 사망한 사람의 아이 2명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으며 딸은 사우디와 카타르를 아버지와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